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우 110-75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세종로청사 505호 /전화 (02)734-5723~4 /전송 734-9347~8
사업지원부 과 장 최 용 철 사무관 최 병 권

문서번호 수개 67400-233

시행일자 1999. 9 . 8 . (년)

(경유).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취 급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보 존	년		
부단장	한영주		
부 장	김영봉	기획심의관	
과 장	최용철		
기 안	최병권		협조

제 목 :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국무총리지시 제1999-20)

1.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기본요소로서 맑고 풍부한 물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수질을 깨끗이 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야 할 공동의 선이기도 합니다.

2. 특히 금강과 영산강은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의 산업시설과 식량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인 동시에 이곳에 살고 있는 735만여명의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3. 그간 정부는 4대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93년부터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강 및 영산강은 수계 중류지역에 발달한 대도시 등의 수계특성으로 인하여 부여취수장 인근 수질은 상수원수 2~3급수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영산강(광주)의 경우도 하천수 4-5등급 수준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어 양 수계에 대한 획기적인 수질개선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4. 따라서 환경부 등 관계부서의 장은 금강수계와 영산강수계의 물수요 및 수질오염현상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역물관리체계의 구축, 수질오염원 입지제한 등 사전예방대책의 강구, 발생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삭감대책,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강화 및 합리적인 물관리 투자계획과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실현가능한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5. 특히, 금번대책이 금강·영산강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실효성 있는 「금강·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을 2000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청호와 주암호 수질보전대책은 대전·광주광역시 등의 광역상수원 임을 감안하여 금년 말까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 수계별 배수구역별 오염원·오염발생량, 수리·수문조사 등 정확한 환경기초조사를 토대로 체계적인 수질관리모델링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수계관리 대책 수립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및 상·하류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대책수립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수립

다. 수질관리는 오염의 사전예방대책이 중요하므로 상수원지역에 오염원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 오염원의 입지를 합리적으로 제한·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량적으로 부하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그 원인자로서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이를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맑은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수혜자도 물 사용자로서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상·하류간의 공존공영이 실현될 수 있는 대책 수립

마. 불법 수질오염 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철저히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스스로 저감하고 수질을 개선하려는 기업, 지자체 등은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

바. 정부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스스로 물을 아껴쓰고 환경보전을 생활화 할 때 쾌적한 환경을 영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도록 물절약 및 수질오염예방 실천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을 적극 추진

사. 이와같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임의 지침에 따라 소관별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실현가능한 모든 대책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2000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받는 곳 : 가(14, 21, 31, 34, 35, 36, 37, 40, 41, 42, 44, 46, 47, 61)

나(06, 12, 13, 14, 15, 16, 17)

國務總理 指示 第1999 - 20號

錦江・榮山江水系 물管理綜合對策
樹立에 關한 國務總理指示

1999. 9

國務調整室 水質改善企劃團

- 次 例 -

I. 錦江・榮山江 물管理綜合對策樹立 指針

1. 물관리 추진체계 구축
2. 과학적인 유역 물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3. 수자원확보 및 물수요관리 강화
4. 수질오염원 입지제한 등 사전예방대책 강구
5. 발생오염물질의 삭감·처리 대책 수립
6.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7.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강구
8.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방안 강구
9. 물관리조직·기능개편 및 법령정비
10. 합리적 물관리 투자계획과 재원조달방안 강구
11. 물절약과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II. 綜合對策 推進日程

I. 錦江・榮山江水系 물管理綜合對策 樹立指針

☐ 目 的

- 금강 및 영산강유역에 안정된 물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 추진

☐ 對象地域

- 금 강 : 금강상류(대청호), 금강하류, 만경강수계 등 3개권역
- 영산강 : 영산강수계, 섬진강(주암호)수계 등 2개권역

☐ 計劃目標

- 水質目標
 - 금 강 : 2005년까지 대청호·용담댐은 1급수 유지, 부여는 2급수로 개선
 - 영산강 : 2005년까지 주암호는 1급수 유지, 나주는 2급수로 개선
- 水 量 : 2011년까지 금강 및 영산강 유역에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량확보

☐ 對策期間 : '99~2011년

☐ 樹立基準 : 물관리종합대책('99. 4), 금강·영산강수계 기초조사('99. 5월 완료)

※ 기타 참고자료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수립중)

1. 물管理 推進體系 構築

□ 수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구 성

- 금 강 : 4대 광역자치단체(대전, 충남, 충북, 전북),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금강수계 물관련기관
- 영산강 : 3개 광역자치단체(광주, 전남, 전북),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영산강수계 물관련기관

○ 수계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

- 금강(영산강) 수계 물관리정책 심의·결정
- 물값조정 및 비용분담 방안 강구
- 상·하류 및 지역간 물분쟁 등 현안사항 조정 등

□ 권역별 “물관리대책협의회” 설치·운영

○ 구 성

- 금 강 : 3대권역별<금강상류(대청호), 금강하류, 만경강>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물관련기관 담당관 및 관계전문가 등
- 영산강 : 2대권역별<영산강, 섬진강(주암호)> 해당지자체 시장·군수, 물관련기관 담당관 및 관계전문가 등

○ 물관리대책협의회의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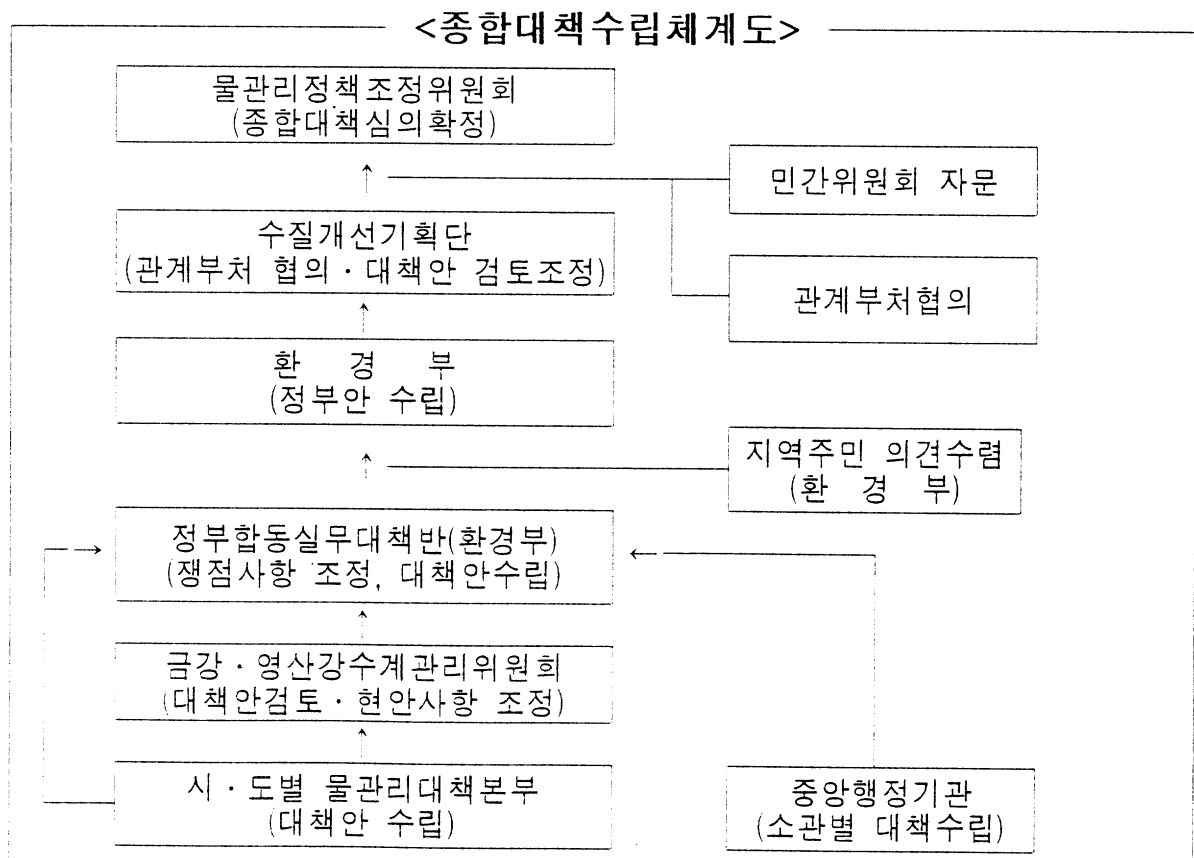
- 권역별 물관리대책 심의·결정
- 환경기초시설의 공동투자·운영 등 광역관리
- 기타 자치단체 및 지역간 물관련 현안문제 협의·조정 등

□ 시·도별 물관리대책본부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총리훈령 제375호, '98.12.2)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관리대책본부에서 종합대책(안) 수립
 - 대상 :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 구성 : 본부장(부단체장), 지자체관계관, 물관리임직원 등
 - 기능 : 해당지자체의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 수립

□ 시·군별 물관리대책본부

- 구성 : 본부장(부시장·부군수), 상하수도·환경담당과장, 환경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
- 주요기능
 - 국가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 수립 추진
 -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 및 인·허가 협의
 - 기타 수질개선 및 수자원확보 관련사업 수립 추진



2. 科學的인 流域 物管理 綜合시스템 構築

□ 금강·영산강유역 수계별 수계 관리 모델개발(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지자체)

- 금강 및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권역별 물관리대책협의회, 물관리대책본부 주관하에 해당 유역별 물관리종합시스템 구축
- 주요권역 및 주요지천별, 배수구역별로 수량, 오염원분포, 오염물질 발생량 등의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역 수계관리 모델개발
 - 권역별 오염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산정 및 삭감계획 수립
 - 금강수계의 경우, 대청호, 용담댐, 금강하구언 등의 수질개선 대책 마련
 - 영산강 수계의 경우 주암호, 동북호, 영산호 등의 수질개선대책 마련
-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시·도의 환경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반 구성·운영 및 환경기초조사결과의 검증 등 자문

□ 물관리정보화 추진

- 수계·권역별 물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기상청, 지자체)
 - 수자원, 수질, 농촌용수, 기상정보 등 분야별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물관련자료 Date Base와 행정구역, 배수구역별 수치도를 연계한 GIS체계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방안 강구
 -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행정기관이 쉽고 빠르게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및 시설 설치방안

3. 水資源確保 및 물需要管理 強化

□ 물공급 관리체계 확립

- 도시개발, 공단조성 등 금강·영산강 유역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 따른 물수요를 감안한 체계적 수자원 확보 전략 수립(건설교통부)
- 다목적댐 건설확대 및 댐건설의 적기 시행을 위한 과학적 댐건설 추진방안 강구
- 발전 등 단일목적댐의 다목적 이용방안 강구 및 기존 다목적댐의 최적화 운영방안 강구(건설교통부, 농림부, 지자체)
- 관개시스템의 과학화, 수도작물의 영농방법개선 등을 통한 농업용수의 저감 내지 효율적 이용 방안 강구(농림부, 지자체)
- 유역내 농업용댐의 증고 등을 통하여 상수원겸용댐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
-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의 용수·공급배분체계를 재검토하여 배분량중 비사용분은 회수, 물부족지역 및 신규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강구(건설교통부, 지자체)
- 하천 표류수를 사용하는 공주, 부여 등 금강 중·하류지역의 신규 용수공급 방안(용담댐, 대청댐 용수배분 계획 재검토)
- 영산강하구 3개 담수호(영산호, 영암호, 금호호)의 상호연계등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 지역간 용수균형을 위한 광역상수도간 Network구축, 상수도 보급율이 저조한 지역의 광역화 및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방안 강구(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대체수자원의 확보방안 강구(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지자체)

- 수원함양림·보안림 조성, 강변여과수 개발, 식수전용댐건설, 지하수개발,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의 개발방안 강구
-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한 기존농업용댐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용량증대 방안 등 다목적화 방안 및 신규 농업용수 개발시 생활용수 확보 등 필요수량 확보방안 검토

□ 비상식수원 확보대책 마련

- 돌발 수질오염사고 및 가뭄 등 비상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비상식수원 확보대책 강구(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광역상수도 및 인근지역 상수도 공급망과의 연계 등

□ 물수요 관리체계 강화

-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한 중수도시설 설치 확대방안 강구(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지자체)
 - 1차적으로 공공건물에 중수도시설 설치의무화 하는 방안 강구
 - 중수도시설 설치에 다른 설치비 지원, 수도요금감면 등 유인책 마련
- 상·하수도요금의 조속한 현실화 방안 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상·하수도 요금의 적정원가 계산방법 정립
 - 현실화 조속 실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과학적인 물수요예측기법 마련 및 이에따른 정확한 장래 물수요 파악(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4. 水質汚染源 立地制限 등 事前豫防對策 講究

□ 상수원 수계영향지역에 대한 오염원 입지제한

-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지역, 지구 지정방안 강구 (환경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 현재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수계 및 영향지역은 조속히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
- 오염원의 입지여건 및 분포, 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토대로 오염원 입지제한 방안
- 상수원영향지역내에서의 환경친화적 농법권장 및 수혜지역에서의 유기농산물 구매확대 지원방안 마련(농림부, 지자체)

□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방안 강구

- 발생오염물질의 과학적·합리적인 삭감체계구축 및 하천·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물질 총량규제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지자체)
- 수계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
- 총량규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자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오염원의 특별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 등 참여 지자체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 수계 인접산림에 대한 수원함양 증진대책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계상수원 근접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산림청, 지자체)
- 수원함양 증진 및 수질오염 예방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보안림지정·관리, 국공유림의 대부 또는 매각제한조치 등을 통한 산림보전 및 환경보전기능의 강화

□ 산업폐수 오염부하량 저감대책 추진

- 산업체의 오염부하량 삭감정도에 상응하여 배출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도입, 폐수재이용 등 처리기술개발 유인정책 활성화 추진(환경부, 산업자원부, 지자체)
- 법규에 의한 강제적 규제가 미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비점오염원 등의 저감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오염물질 배출기업간에 협의를 통해 관리목표를 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자율환경관리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환경부, 지자체)
- 자율환경관리제 시행분야 개발 및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수질관리기준 등 제도개선

- 수질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수질환경기준의등 대상항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의 방류수 허용기준의 단계적인 강화방안(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5. 發生汚染物質의 削減・處理對策 樹立

□ 하수종말처리시설(질소·인 처리시설 포함) 설치, 하수관거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의 조기확충

- 고도처리 및 자동화 기술 등 선진하수도 기술을 도입,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주민친화적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지자체)
- 하수관거에 대한 수밀시험 및 내부조사 등 관거검사로 하수관거의 부실시공 방지책 강구 및 노후·부실관거의 지속적인 조사와 개보수사업 추진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내 입지제한 완화방안 강구(환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가시 농지전용,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환경성검토 등의 협의업무를 통합처리하는 방안 강구
-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의 조기확충 방안 강구(환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지자체)
- 오·폐수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전면조사 실시 및 구체적 설치계획, 자원확보 대책 수립
-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우·오수 합류관거를 분류식관거로 전면 대체하는 방안 추진(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기존건물의 저효율 단속정화조를 고효율오수정화조(합병정화조)로 교체계획 수립(환경부, 지자체)

□ 오·폐수의 처리·운영체계 개선

- 오·폐수의 발생원별 처리체계 강화(환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지자체)
 - 오·폐수 처리를 종말처리와 발생원별 처리개념으로 나누어 종말처리지역내 모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체계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검토
 - 하수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가 불가능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는 합병정화조 등 고성능 정화처리제도를 도입하여 발생원에서의 고도처리방안 추진
-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하수관망의 전산화, GIS구축 등 하수도시설의 통합관리 및 정보화 추진
 - 환경기초시설의 권역별 공동관리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대행관리제 민영화 방안 강구

□ 수계 근접지역의 축산분뇨처리대책

- 축산분뇨의 완전처리와 자원화 촉진(농림부, 지자체)
- 수계근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 축산공공처리시설의 운영정상화, 축산분뇨 수거 및 운반처리체계 구축(환경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지자체)

□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

-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및 폐공방치 등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 주변지역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및 폐공예치금제도 도입 등 철저한 원상복구 방안 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확대 강화하고, 지하수에 대한 수량·수질·폐공·이용공 등의 지하수 종합전산망구축 등 과학적인 지하수관리체계 구축방안 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폐광산 유출수 방지대책 추진

- 폐광산지역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강구(환경부, 산업자원부, 지자체)
- 자연정화시설 설치기준미만의 폐광산의 유출수 처리대책 강구(산업자원부)

6. 非點汚染源 管理對策

□ 농업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농지·축사 등 농업지역에서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최적화 방안 강구(농림부, 지자체)
 -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비료·농약의 사용억제를 위한 환경농업의 보급확대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축 기술개발·보급
 - 농업지역에 소규모 습지 또는 소를 설치 비점오염원을 차단
 - 축분의 농지살포시 적용시기, 시비방법 등에 대한 최적방안 강구 및 가축분뇨 살포지역을 제한적으로 지정관리

□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시가화지역은 해빙기와 장마시작전 도시청결관리를 강화(환경부, 지자체)

- 초기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침전처리후 방류할 수 있는 저류지 설치방안 강구(건설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 강우시 노출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비점오염원 배출업체의 특별관리방안 강구(환경부, 지자체)
 - 목재, 석탄, 폐기물보관·처리, 자동차정비, 공사장 등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우수배출허가제도 도입방안

7. 水質汚染行爲에 대한 監視・團束強化 및 水質汚染事故豫防對策 講究

☐ 오염원 및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강화

- 검찰,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 지자체 등 감시·단속기관의 상시 감시·단속체계 구축(법무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하·폐수처리시설과 대형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체계(TMS) 구축방안 강구(환경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지자체)

☐ 대형배출업소 및 상습수질오염위반업소 특별관리

- 대형배출업소 및 수질오염 상습위반업소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특별관리하는 방안과 상습위반자는 체벌위주의 업종처벌 방안 강구(법무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민·관 합동에 의한 수질오염행위 감시기능의 활성화

- 하천 및 상수원지역 등에 대한 공공감시기능과 민간감시기능을 연계한 입체적인 감시활동 체계 구축(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주요 하천에 대한 민간하천감시반 구성·운영으로 민간자율하천 감시기능을 조기정착
- 공공근무요원을 상수원 상류,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하천순찰 등 하천감시활동 강화

□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상·하류구간 및 수질오염우려지역, 상수원지역 등에 대한 수질오염 자동감시 모니터링 설치방안 강구(환경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지자체)
 - 수질오염정보시스템은 수질오염측정망과 연계하여 전산화하는 방안

□ 수질오염우려지역의 특별관리방안 강구

- 대규모 공단, 폐기물매립장, 상수원상류 배출업소 밀집지역 등을 사고우려지역으로 선정,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분야별 특별관리방안 강구(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유독물 안전관리 및 운반차량의 안전수송체계를 확립하고, 유독물 제조·보관업체의 경우 자체방제대책 및 사전대비 긴급 방제체계를 구축
 - 특히 상수원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교량에서의 유류 및 유독물 수송차량의 운행제한 등

□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능력의 제고

-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관계기관간 비상연락 및 대응·보고체계 재정비(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제상황과 유사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기관별 확보 비치할 방제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

8. 環境親和的 河川管理方案 講究

□ 환경요소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하천관리제도 마련

- 수계특성에 부합되는 하천정비 모델을 개발하여 하천정비사업(소하천정비사업 포함)을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강구(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지자체)
 - 하천복개, 하천부지주자창 설치기준을 강화·제한하는 방안 검토
 - 하천정비시 콘크리트 호안 조성에 따른 수생태계 파괴와 수생생물의 서식지 훼손방지 방안 강구
 - 인공습지조성, 수생생물재배 등 소하천의 자정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 강구
- 상수원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댐주변과 하천부지의 경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강구(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 하천부지내 경작시 환경친화적 영농조건을 강화하고, 조건위반시 하천점용 및 경작허가 취소 등의 경작제도 개선

- 수계 주요하천 및 오염지천 퇴적물의 주기적인 오염도 조사 및 준설, 수생생물이용 등 체계적인 수질개선방안 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하천유지용수 확보

- 수계내 다목적댐 등에 대한 목적별 용수배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 특히 갈수기에 공급자, 수요자 및 수질관리기관이 공동으로 댐 방류를 결정하는 관계기관 “댐방류협의체” 구축
- 소하천, 지천에서의 유지용수 확보방안 강구
 - 합류식 지역의 하수관거를 오·우수 분리관거로의 교체방안 강구(환경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 오수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지천별 소규모 처리장 설치 등의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강구

9. 물管理組織・機能改編 및 法令整備

□ 유역관리청 설치방안 강구

- 금강·영산강 수계의 환경관리청, 관련지자체 등 감시단속기관의 단속기능을 개편하여 환경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권역별 수계특성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감시대와 환경지대를 체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준수법화하는 방안강구(법무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지방물관리조직 및 기능의 합리적 정비방안 강구

- 지방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생산성 제고등을 위해 자자체의 물관련 조직·인력의 합리적 정비(환경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적 운영대책 마련(전문관리기관 위탁운영 등)

☐ 종합대책 추진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정비

-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검토
 - 상수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구역내 거주주민의 규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에 따른 재원확보 및 오염원의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환경부, 지자체)
- 하천법은 유역관리체계, 하천환경 및 생태계 보전등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소하천정비법은 하천법에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 강구(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 댐건설 촉진을 위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조속 제정(건설교통부)

10. 合理的 물管理 投資計劃과 財源調達方案 講究

☐ 기존 투자계획 재점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여건, 오염물질 발생량 및 처리수준, 수질오염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우선순위 및 기존투자계획 재조정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환경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지자체)

☐ 지자체의 물관리재원 확충방안 추진

-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방안 강구(환경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자체)
 - 물사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금강 및 영산강 수계 적용방안
 - 확보된 재원은 피규제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사업 등에 사용
-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시·군)에 대한 차등지원과 국고 및 양여금 증대, 이차보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환경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자체)
-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환경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지자체)

11. 물질약과 水質汚染豫防을 위한 環境敎育·弘報 實施

☐ 초·중·고교생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

- 현장경험과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강순례”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스카우트, 그린스카우트 등 학생단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을 확산하는 방안강구(교육부, 환경부, 지자체)
 - 중·고생 환경과목의 필수과목화 방안 강구 및 환경과목 교과서 내용 보완(교육부, 환경부)

☐ 민·관·군·학생 합동으로 주기적인 『금강·영산강수계 하천대정화 운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방안 강구(환경부, 국방부, 교육부, 지자체)

□ 「맑은물 지키기」 국민실천운동 전개

- 국민들이 지켜야 할 「맑은물 지키기 실천운동 수칙」 제작 배포 등 「맑은물 지키기 실천운동」 적극 추진(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 광역지자체별로 「맑은물 지키기」대국민제안제도 운영방안 추진

□ 권역·지역단위 물관리 워크숍 개최

-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물보전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권역 및 지역단위별 물관리워크숍 적극추진(환경부,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물관리대책본부(본부장 : 부단체장) 관계관, 물관련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물보전·관리토론 및 현장시찰 등

Ⅱ. 綜合對策 樹立・推進日程

☐ 대청호・주암호 수질보전대책(안) 마련 : '99. 10월까지

☐ 대청호・주암호 수질보전대책 심의・확정 : '99. 12월까지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상정・심의('99. 11월)

☐ 소관별 대책수립(각부처 및 지자체) 환경부 제출 : '99. 12월말까지

○ 금강 및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 대책과 주요 현안사항 등을 검토・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종합대책(안) 마련(주관 : 환경부) : 2000. 3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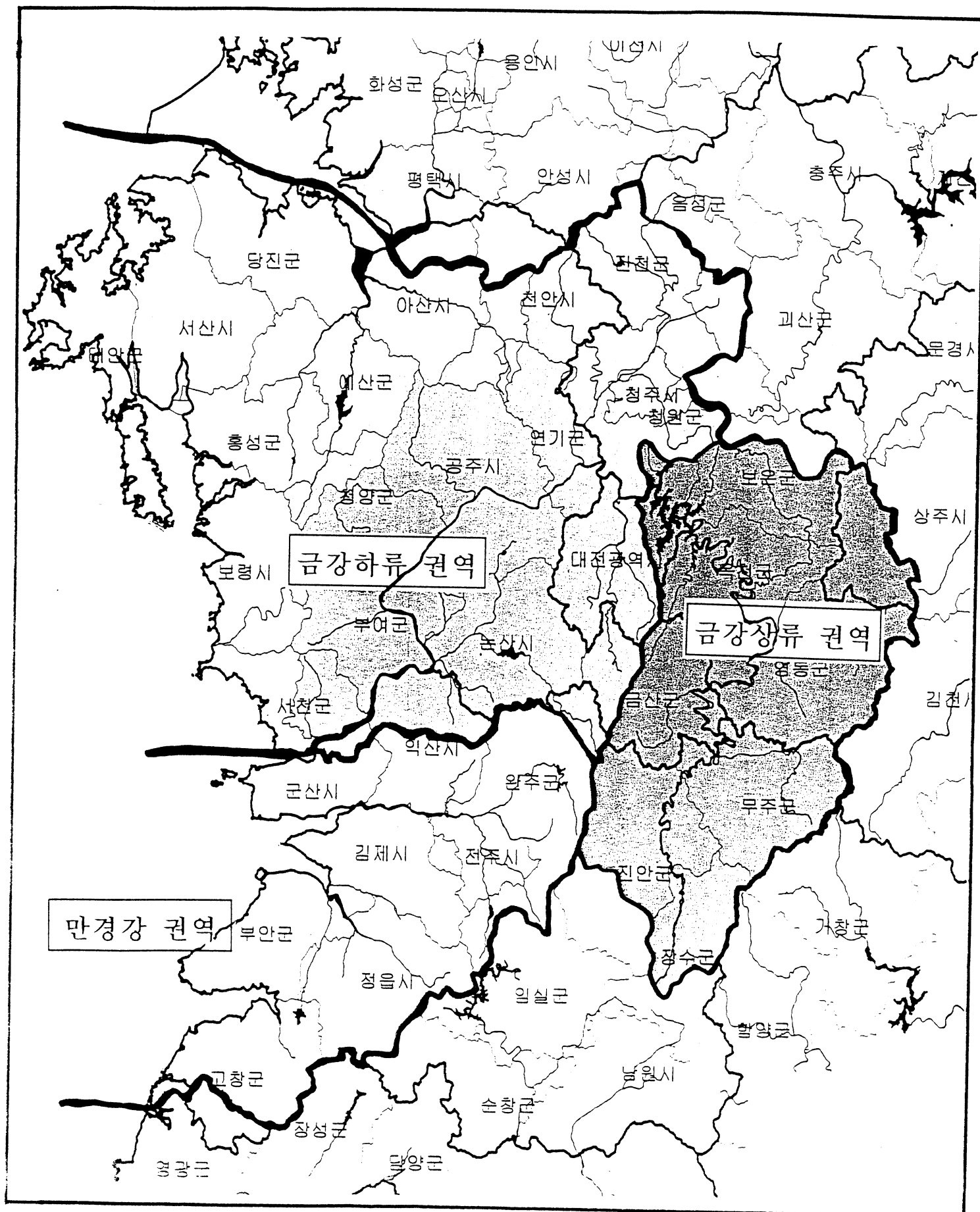
☐ 관계부처협의 및 공청회 : 2000. 4월까지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확정(국무조정실) : 2000. 6월까지

○ 종합대책수립 관련 쟁점사항 협의・조정

○ 물관리민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심의(2000. 5월)

錦江 圈域 現況圖



榮山江 圈域 現況圖

